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01
----------	-----

제출년월일 : 2001. 7.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읍면동장 위임사무중 관련법령의 폐지와 대체 시행등으로 위임 사무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능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세정과 소관(10,11,12항)
 - 10,11,12항의 근거법령인 제천시세조례 제6조를 제10조로 변경
→ 제천시세조례의 전면개정('98.4.11)으로 법조문의 재배열
- 사회복지과 소관(1,2,4,5,6항)
 -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2000.8.18)되고 있으며 “요구호 대상자 결정” 사무는 실제로는 시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삭제
 - 「의료보호법」의 개정(99.2.8)으로 “의료보호증”을 “의료보장증”으로 변경
 -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1.3.24)됨에 따라 시체등의 매· 화장 등 관련사무와 근거법령 정비

○ 농업축산과(14항)

-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의 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841호('95.12.29))으로 위임사무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규정 4조에 의거 재위임 사무에 해당되므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제천시사무의위임규칙」으로 등재

○ 농업축산과(3항)

- 근거법령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의 삭제(94. 12.22)와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의 개정('95.12.29)으로 위임사무에서 삭제

○ 농업축산과(4항)

- 관련법의 개정('97. 12. 23)으로 근거법령 변경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조로 변경

○ 농업축산과(5항)

- 축산법의 개정('99. 1. 29)으로 위임사무에서 삭제
→ 가축사장은 축협에서 개설·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사장은 가축시장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축협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축산법27조)

○ 산림녹지과 소관 (1.2항)

- 「산림의 임산물의 반출허가 확인증 발급」은 위임사무에서 삭제
→ 산림법 제 92조 삭제 ('97. 4. 10)
- 「임산허가」사무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임산신고」로 변경
→ 산림법 제 98조 변경 ('94. 12. 22)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재위임)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첨부 1. 관계법령 사본

2. 입법예고 사본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읍·면·동 권한위임사항

실과명	사무명	근거법령
문화관광과	1~ 2. (생략)	
자치행정과	1~ 2. (생략)	
세정과	1~ 9. (생략) 10. 특별징수 신고납부분, 수시분 접수정리 및 시 송부 11. 과세자료 조사보고, 전산 입력 및 관리 12.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제천시세조례 제10조 제천시세조례 제10조 제천시세조례 제10조
회계과	1. (생략)	
사회복지과	1. 의료보장증 발급(재사용) 2.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3. 개장신고 4. 매장신고 5. 화장신고 6. 개장,매장,화장 신고필증교부 7. (생략) 8. (생략)	의료보호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4항
환경관리과	1~ 3. (생략)	
농업축산과	1. 자가 도살신고(읍·면) ※ 단, 고시지역에 한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제4조
산림녹지과	1. 입산신고	산림법 제98조
건설과	1. (생략)	
도시건축과	1~ 9. (생략)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		
실과명	사무명	근거법령	실과명	사무명	근거법령
세정과	1~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u>제천시시세조례 제6조</u> <u>제천시시세조례 제6조</u> <u>제천시시세조례 제6조</u>	현행과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제천시시세조례 제10조</u> <u>제천시시세조례 제10조</u> <u>제천시시세조례 제10조</u>
사회복지과	1. <u>요구호 대상자 결정</u> 2. <u>의료보호증 발급(재사용)</u> 3. (생략) 4. <u>매·화장증명</u> 5. <u>개장신고</u> 6. <u>시체 매화장 신고</u> (신설) (신설) 7. (생략) 8. (생략)	<u>생활보호법 제21조</u> (생략) (생략) <u>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u> <u>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제5조제2항</u> <u>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제5조제1항및시행규칙제1조</u> (신설) (신설) (생략) (생략)	현행과같음	(삭제) 1. <u>의료보호증발급(재사용)</u> 2. (현행과 같음) (삭제) 3. <u>개장신고</u> 4. <u>매장신고</u> 5. <u>화장신고</u> 6. <u>개장·매장·화장신고필증교부</u>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u>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제3항</u> <u>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제1항</u> <u>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제2항</u> <u>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제1항</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실과명	사무명	근거법령	실과명	사무명	근거법령
농업축산과	1. 농수산부 훈령제 3조의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5,000㎡ 이하의 농지임시전용(읍·면)	농수산부 훈령 제784호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5조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 제1호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읍·면)	농수산부 훈령 제784호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5조		(삭제)	(삭제)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년생 식물 및 관상수식재 재배신고(읍·면)	농수산부 훈령 제784호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5조		(삭제)	(삭제)
	4. 자가도살신고(읍·면) ※ 단, 고시지역에 한함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8조		1. 자가도살신고(읍·면) ※ 단, 고시지역에 한함 (삭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조 (삭제)
	5. 기축사장 자도살특고(읍·면)	축산법 제 41조			
산림녹지과	1. 산림의 임산물반출 허가 확인증 발급	산림법 제92조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2. 입산허가	산림법 제98조		1. 입산신고	(현행과 같음)

제3면 총무사회 제3장 세징 제천시세조례

제천시세조례

[1998. 4. 11. 제314호]

개정 1999. 4. 17 조례 제369호
개정 1999. 7. 24 조례 제397호
개정 2000. 3. 20 조례 제439호
개정 2000. 11. 25 조례 제473호
개정 2000. 12. 30 조례 제483호

제 1 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신설 2000. 3. 20>
5. 농업소득세 <개정 2000. 12. 30>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

제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시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 3)

제3편 총무사의 제3장 세정 제천시세조례

②<삭제 2000. 3. 20>

③시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3. 20>

④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시세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3. 20>

제9조의2(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시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시에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1. 25>

제 3 절 부과 징수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시사무의위임조례에 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
하의 소액 시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을 제외한다)이 2,000천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00. 12. 30>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
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
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분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 3)

제3편 총무 제3장 세정 제천시세조례

제천시세조례(1995. 1. 3)

개정 1995. 6. 19 조례 제150호

개정 1995. 12. 30 조례 제166호

제 1 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적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 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력,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위하여질 조치 및 부과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도축세
6. 담배소비세
7. 종합토지세

③목적세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등에 관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품군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 2)

제3편 총무 제3장 시장 제천시세조

제2절 부 과 징 수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제당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 기한이 만료될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상명
 2. 허가등의 종류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 세액제에 대하여 동종의 세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생 활 보 호 법	생활보호법시행령	생활보호법시행규칙
<p>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보호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1조 (보호의 결정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의 종류·방법 및 보호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보호대상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자산상장등의</p>		<p>제5조(보호의 개시) 법 제21조제1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일로부터 개시한다.</p> <p>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회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보호개시일로 한다.</p>
생 활 보 호 법	생활보호법시행령	생활보호법시행규칙
<p>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제22조 (지도와 지시) ① 보호기관은 피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지도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또는 지시는 피보호자의 자유를 존중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보호기관은 피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도 또는 지시를 강행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3조 (보호의 변경) ① 보호기관은 피보호자의 소득·자산상황·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보호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보호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변경은</p>		

第38條 社會福祉 第3章 生活保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문가의 이용등 기타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조사결과와 보고등)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 (급여의 결정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 (급여의 실시등)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한 급여는 해당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

第38編 社會福祉 第3章 生活保護 醫療保護法

24. 99. 9. 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災害救護法에 의한 罹災者
 3. 殺死傷者禮遇에 관한法律에 의한 殺傷者 및 殺死者의 遺族
 4. 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法律 및 國家有功者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의 適用을 받고 있는 者와 그 家族으로서 國家報勳處長이 醫療保護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者중 保健福祉部長官이 醫療保護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者
 5.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지정된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 및 그 家族으로서 文化財廳長이 醫療保護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者중 保健福祉部長官이 醫療保護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者
 6. 北韓離脫住民의 보호및定着支援에 관한法律의 적용을 받고 있는 者와 그 家族으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醫療保護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者
 7.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 관한法律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등을 받은 者와 그 家族으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醫療保護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
 8. 기타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거나 生活이 어려운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에 대하여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基準을 달리할 수 있다. <改正 95. 8. 4>
- 第5條 (適用排除) 保護對象者가 다른 法令에 의하여 醫療保護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醫療保護를 행하지 아니한다.
- 第6條 (保護機關) 醫療保護는 保護對象者의 居住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 第7條 (醫療保障證) 市長·郡守·區廳長은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醫療保障證을 발급하여야 한다. <改正 95. 8. 4, 99. 2. 8>
- 第8條 (보호의 내용) ①이 법에 의한 醫療保護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診 察
 2.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3. 藥劑 또는 治療材料의 支給
 4. 醫療施設에의 收容
 5. 看護
 6. 移送 기타 醫療目的의 達成을 위한 措置
 7. 分 檢

(주 177)

722

한자

⑥법률 제5853호(1999.2.8)
의료보험법등개정법률

의료보험법등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험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험대상자(이하 "보험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등을 말한다.
 2. "제1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험진료기관중 통원에 의한 진료를 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을 말한다.
 3. "제2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험진료기관중 입원에 의한 진료를 하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을 말한다.
 4. "제3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험진료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진료를 담당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통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의 "제1차(의료보험)"을 "(의료보험)"으로 하고 "제2차(의료보험)"을 "(의료보험)"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의료보험진료기관) ①제1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된 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노인장애통증의료법위탁병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된 한 약국
- ②제2차진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허가한 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원

③제3차진료기관은 제2차진료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되,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을 거부하지 못한다.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이 개설·설치되거나 개설된 의료기관등의 신고·허가·등록사항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보조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보조기관은 의료보험진료기관으로부터 보조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보험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험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비용의 심사·지급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조기관은 의료보험진료기관등이 불당리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하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보조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불당리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의료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의료보험비용을 받을 권리 및 대당금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의료보험진료기관의 지정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진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보험진료기관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호하였거나

.../hlawhon.cgi?srchform=L&workkind=srch&dkind=2&key=A10178119990:2001-06-09

- 6 -

葬 事 등 에 관 한 法 律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保健衛生상의 危害가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8條(埋葬·火葬 및 改葬의 申告) ① 埋葬을 한 者는 埋葬후 30日 이내에 埋葬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②火葬을 하고자 하는 者는 火葬場 (第7條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火葬을 하는 施設 또는 場所를 말한다)을 관 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 하여야 한다.</p> <p>③改葬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 號의 구분에 따라 屍體 또는 遺骨의 現存地 또는 改葬地를 관할하는 市 長·郡守·區廳長에게 각각 申告하여 야 한다.</p> <p>1. 埋葬한 屍體 또는 遺骨을 다른 墳墓 로 옮기거나 火葬하는 경우 : 屍體 또는 遺骨의 現存地 및 改葬地</p> <p>2. 埋葬한 屍體 또는 遺骨을 納骨하는 경우 : 屍體 또는 遺骨의 現存地</p> <p>3. 納骨한 遺骨을 다른 墳墓로 옮기거나</p>	<p>(島嶼地域)에서 제4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p>	<p>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장사등에관 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태(死胎)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 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의 경우에는 별지 제2 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 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사태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 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葬事 등에 관한 法律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火葬하는 경우 : 改葬地</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함에 있어서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設墓地 또는 公設火葬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公設墓地 또는 公設火葬場을 設置·관리하는 市·道 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⑤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⑥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申告畢證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p> <p>第9條(埋葬·火葬 및 改葬의 방법 등)</p> <p>①埋葬하고자 하는 者가 屍體에 대하여 藥品處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衛生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체의 악품처리기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에 대한 악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

■ 埋葬 및 墓地 등에 관한 法律

제1조 (目的) 이 법은 埋葬·火葬 및 改葬과 墓地·火葬場 및 納骨堂의 施設과 管理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國土의 效率的인 利用 및 公共福利의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定義) ① 이 법에서 埋葬이라 함은 屍體(妊娠 4個月以上の 死胎를 包含한다) 또는 遺骨을 땅에 묻거나 땅에 納骨하여 葬事함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火葬이라 함은 屍體를 불에 태워 葬事함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改葬이라 함은 埋葬한 屍體를 다른 墳墓에 옮기거나 埋葬 또는 收藏한 遺骨을 다른 墳墓 또는 納骨堂에 옮기거나 또는 埋葬한 屍體를 火葬함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墳墓라 함은 屍體를 埋葬하거나 遺骨을 埋葬하는 施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墓地라 함은 墳墓를 設置하기 爲하여 墓地로서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以下“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은 區域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納骨堂이라 함은 遺骨을 收藏하기 爲하여 納骨堂으로서 道知事の 許可를 받은 施設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火葬場이라 함은 屍體를 火葬하기 爲하여 火葬場으로서 道知事の 許可를 받은 施設을 말한다.

제3조 (埋葬 및 火葬의 時期) 埋葬 또는 火葬은 다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死亡 또는 死産時로 부터 24時間을 經過한 後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妊娠 7個月 未滿의 死胎는 例外로 한다.

제4조 (埋葬, 火葬 및 改葬의 場所) ① 埋葬은 墓地以外의 區域에서는 할 수 없으며, 墓地의 面積 및 施設物의 種類·크기等は 大統領令으로 規定하는 基準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墳墓의 占有面積은 1基當 20 平方미터以內, 合葬은 25平方미터以內로 한다.

② 火葬은 火葬場以外的 施設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火葬場施設이 없는 市 또는 郡에 있어서는 例外로 한다.

③ 改葬은 墓地, 火葬場 또는 納骨堂以外的 施設에서는 할 수 없다.

④ 他人의 墓地에는 그 設置者의 承諾書를 받지 아니하면 埋葬 또는 改葬을 할 수 없다.

제5조-(埋葬等の申告) ① 埋葬, 火葬을 하고자 하는 者는 埋葬地, 火葬地の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以下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改葬을 하고자 하는 者는 屍體 또는 遺骨의 現存地와 改葬地の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市長·郡守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埋葬, 火葬 또는 改葬의 申告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墓籍簿에 記載하고 그 申告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④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墓地の 管理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以外の 一定한 期間과 地域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埋葬者 또는 緣故者 등으로 하여금 墳墓에 대한 一齊申告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埋葬·火葬 및 改葬의 方法 等) 埋葬·火葬 또는 改葬의 方法과 墳墓 및 遺骨箱子의 形態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제6조 (屍體處理者 不明 等) ① 屍體의 埋葬 또는 火葬을 할 者가 없거나 判明되지 아니할 때에는 屍體現存地の 市長·郡守가 埋葬 또는 火葬을 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埋葬 또는 火葬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제7조 (公設墓地, 公設火葬場 또는 公設納骨堂의 設置) ①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市, 郡은 屍體의 處理를 爲하여 公設墓地 또는 公設火葬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市·郡은 필요에 따라 公設納骨堂을 設置할 수 있다

매장및요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매장등의 신고) ① 매장및요지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체매장(화장)신고서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사태매장(화장)신고서에 의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장신고서에 의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은 각각 해당신고서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제2조 (사설요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 설치의 허가신청)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요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설요지(화장장·납골당)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하고자 하는 사설요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요지의 경우에는 실측도 및 구적표와 임야대장등본
2.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경우에는 부지 및 건물의 도면
3. 삭 제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요지의 구역 또는 사설화장장이나 사설납골당의 시설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변경후의 구역 또는 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요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폐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지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설요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요지·화장장·납골당 설치 허가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2조의 2 (관리비 및 사용료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최고한도액은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묘적부동의 비치) ① 묘지(영 제5조제2항제1호의 나, 다, 라에 해당하는 사설묘지를 제외한다)의 관리인은 묘지의 소재지·면적 및 분묘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부지면적 및 건물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화장부 또는 제8호서식에 의한 납골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매장·화장증명서등의 교부) 묘지(영 제5조제2항제1호의 나, 다, 라에 해당하는 사설묘지를 제외한다)·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화장 또는 납골을 수장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시체(사태)·매장(화장·납골)증명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인의 보고) ① 묘지(영 제5조제2항제1호의 나, 다, 라에 해당하는 사설묘지를 제외한다)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분기별로 매장·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당해 분기종료후 10일 이내에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납골상황의 보고는 제10호서식에 의한 매장·화장·납골상황보고서에 의한다

제5조의2 (무연고 유골의 처리) ①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치기간이 경과한 유골에 대하여는 이를 땅에 묻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며, 심도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대한 개장 허가신청)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그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1994. 5

농 립 수 산 부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1990. 8. 17. 농림수산부훈령제713호>

개정 농림수산부훈령제745호('92.2.28)
농림수산부훈령제772호('93.8.18)
농림수산부훈령제783호('94.3.28)
농림수산부훈령제784호('94.4.30)(전문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특조법시행령 및 특조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과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등의 범위)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특조법·특조법시행령 및 특조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기타 지적법에 의한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하 "사실상 농지"라 한다) 및 지소·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이하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법시행일(1973. 1. 1)전부터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재배지이외의 용도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한다.
- 1-2.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한 사실상농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산림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유실수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가목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주거시설등은 가급적 주거지역을 활용하여 설치토록 하되 부득이하게 녹지지역 농지에 농어가 또는 공공단체등이 특조법시행령 제 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11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농지전용신고증 발급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농지전용신고증 발급으로 인한 탈법행위 또는 농지의 무단전용을 방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중소기업공장의 신고증설) ① 특조법 제47조제1항제4호 및 동시행령 제 5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존 중소기업공장과 연결하여 증설하는 경우로서 증설면적이 3천300㎡이하하여야 함.

2.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특조법의 행위제한 규정등 타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용시에는 농지조성비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조의 규정은 특조법 부칙에 의거 '95. 6. 11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4절 사무위임

제15조(사무위임) ①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사무위임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 제3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천300㎡이하의 농지의 일시전

용에 관한 권한

2. 특조법시행령 제5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3. 특조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에 관한 권한
- ② 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면적을 초과하여 사무위임을 할 수 있다.

제3장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제16조(사실상 농지등에 대한 부과) ① 관할청이 조성비등을 부과함에 있어 과수원은 전을 기준으로 하고 사실상 농지는 주재배작목에 따라 담 또는 전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는 담을 기준으로하여 조성비등을 부과한다.

제17조(조성비등 부과 및 감면)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시행령 제8조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당해 조성비를 부과 또는 감면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농지를 전용하는 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당해 조성비를 부과 또는 감면한다.

③ 전용부담금의 부과는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전용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는 특조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도시계획구역의 농지전용협의시 조성비등 부과기준 및 방법) ①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과 신규 도시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전문개정 농림부훈령제897호('97. 4. 22)

개정 농림부훈령제1060호('01. 1. 20)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농업·농촌기본법·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나.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다.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2. 제1호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농지개량시설”이라 한다)의 부지

3.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2항 각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목의 시설의 부지.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농지전용결자를 거쳐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고정식온실·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납입자와 환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채권양도·양수서 및 채권양도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납입자가 다수인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자 이외의 다른 명의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 8 절 사무위임등

제38조(사무위임) ①시장·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권한 중 3천 300제곱미터이하의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②시장·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의 면적을 초과하여 사무위임을 할 수 있다.

제39조(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의 우선사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2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를 농지관리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출장여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전용허가 등의 결정기관 및 협의요청기관의 농지전용관련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부 칙 ('97. 4. 22, 제89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보완지침(농지51311-288, '96.4.17)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1. 1. 20, 제106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4編 農 業 第5章 農政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8章 (第53條 내지 第65條) 削除 <93·12·31 法4690>

第9章 補 則

第66條 (準農漁村地域에 대한 지원)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의의 地域으로서 農業振興地域으로 지정된 地域과 都市計画法에 의한 開發制限區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農漁村으로 보아 이 法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4·12·22 法4818)

第67條 내지 第69條 削除 <2000·1·28 法6221>

第69條의2 削除 <94·12·22 法4817>

第70條 (許可取消등) ①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한 事業을 施行하는 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중지, 물건의 改築·變更·移轉·제거의 措置를 命하거나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94·12·22 法4818, 97·12·13 法5454>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事情의 變更으로 인하여 事業의 계속적인 施行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公益을 해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措置를 命하거나 處分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法4818, 97·12·13 法5454>

③및 ④削除 <97·12·13 法5453>

第70條의2 (청문)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7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12·13 法5453)

第71條 (보고 및 檢査)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관하

第24編 農 業 第5章 農 政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5條 (農林漁業외의 就業의 訓練支援等)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者등과 그 家族의 農工團地入住工場 및 農林水産物加工工場에의 就業에 필요한 職業訓練을 실시하고 雇傭情報 제공·就業指導 및 就業알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農工團地에 入住하여 工場을 設置·운영하는 者(이하 “入住業者”라 한다) 및 農林水産物加工工場을 設置·운영하는 者의 從業員訓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3·6·11 法4552, 94·12·22 法4818>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을 위하여 따로 訓練 機構 및 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第26條 내지 第28條 削除 <2000·1·28 法6221>

第29條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의 육성) 市長·郡守는 農漁村의 賦存資源과 遊休勞動力을 효율적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農漁村特産品生産團地(이하 “特産團地”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1>

第30條 削除 <94·12·22 法4823>

第31條 (보고) ①市長·郡守는 매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農外所得増大計劃의 推進實績을 綜合作成하여 다음 年度 1月末까지 管轄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道知事は 매년 市長·郡守로부터 보고받은 農外所得増大計劃의 推進實績을 보고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農林部長官에게 綜合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5章 (第32條 내지 第39條) 削除 <2000·1·28 法6221>

第6章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을 위한 投資財源등

第40條 내지 第45條 削除 <94·12·22 法4817>

第45條의2 削除 <99·2·5 法5758>

第46條 削除 <2000·1·28 法6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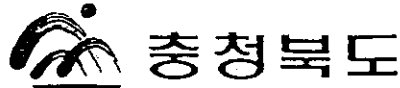
第47條 削除 <94·12·22 法4817>

第7章 (第48條 내지 第52條) 削除 <99·2·5 法5758>

(주 118)

1118-8

www.cb21.net



☎ 360-765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전화 043)220-3744 / 전송 220-3719
 농정과장 김종만 농지관리담당사무관 서관석 / 담당자 이현홍 / leehhy@hanmail.net

문서번호 농정51311-333

시행일자 2001.03.10 (3년)

공개여부 공개

수 신 더01-12

참 조 농지관리담당과장

선	람	일	지
접	수	시	시
일	일	2001. 3. 13	결
자	번	814	재
시간	호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농지전용 사무위임 관련자료 송부

농지전용 사무위임과 관련하여 우리부서의 의견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시·군에서는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권한위임에 따른 규칙등 개정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불임 농지전용사무위임 조례·규칙 제·개정 검토의견 등 1 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전결 농정과장 김종만



농지전용사무위임 조례·규칙 제·개정검토의견

농정과

제출안	조례안	○○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임사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중 3,300㎡이하의 허가에 관한 권한 (농지법제38조)
검토의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제1항규정에 농지를 동향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권한위임 없음> ○ 농지법제38조(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제1항에 농지를 동향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동법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72조제2항제2호규정에 의거 동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p><「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에 의한 사무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규정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권한중 3,300㎡이하의 허가에 관한 권한」과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성격	○ 농지법은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및 제4조(국가등의 의무) 등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지방적 이해가 없는 국가사무성격으로 기관위임사무임
	조례제정대상검토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한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규칙대상검토	○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관위임사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등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위 위임사무 조례개정안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판례

< 판례 >

-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이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단체장인 원고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조례안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례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규모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무는 법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무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거주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제11조는 일반적인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을 규정한 것이고, 개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 주택건설계획승인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입법의 타당성 여부를 별문제로 하고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거주와 관련된 이유만으로 자치단체사무로 해석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당하다 (대판 1992.7.28, 92 추 31).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각고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도시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 및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대판 1995.11.14, 94 누 13572).

第25編 畜産 第4章 家畜衛生・畜産物検査 畜産物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8. 7. 3 농림부령 제1267호
개정 1998. 8. 1 농림부령 제1268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999. 2. 18 농림부령 제1315호
1999. 9. 7 농림부령 제1345호(축산법시행규칙)
2000. 3. 18 농림부령 제1358호(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
2000. 3. 27 농림부령 제1360호(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2000. 12. 11 농림부령 제1373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등) ①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가기관이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축산물위생검사가기관이 행하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위생검사가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축산물위생검사가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가공공정서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 조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법 제 7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된 받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비저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서 관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 5 조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등) ①법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외에서의 가축의 도살·처리신고는 별지 제 1 호식식에 의한다.

461

(주 126)

畜産物衛生處理法	畜産物衛生處理法施行令	畜産物衛生處理法 施行規則
<p>법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農水産部長官이 指定하는 地域 안에서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獸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農水産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指定地域 내의 流通과 需給의 圓滑을 期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指定地域의 에도 第4條의 作業場設置를 許可할 수 있다. <新設 77.12.31></p> <p>第3條(作業場) ① 獸畜의 屠殺·解體와 糞孔은 이 法에 의한 作業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獸畜을 屠殺·解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7.12.31, 82.12.31, 84.12.31></p> <p>1. 負傷·難産·産褥麻痺·急性敗血症 등으로 인하여 獸畜을 屠</p>	<p>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p>	
<p>經하여야 할 不可避한 事由가 있을 때</p> <p>2. 學術研究에 供할 때</p> <p>3. 附 除 <82.12.31></p> <p>4.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돼지고기 羊을 自家消費에 供하고자 할 때</p> <p>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獸畜을 屠殺·解體한 者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供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82.12.31></p>		<p>제 8 조(자가소비를 위한 도살)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고기 羊을 자가소비에 供하기 위하여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 해체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벽지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p> <p>제 9 조(신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소속의 가축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의</p>

第25編 畜産 第2章 畜産振興 畜産法

⑤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1. 26]

第4章 家畜市場 및 畜産物の 等級化

第27條 (家畜市場의 開設等) ①家畜市場은 農産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이하 “畜産業協同組合”이라 한다)이 開設·관리한다. <改正 99. 9. 7>

②市長·郡守는 家畜市場을 開設한 畜産業協同組合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市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施設의 개선 및 整備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문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8條 (畜産物の 等級判定) ①農林部長官은 畜産物の 品質向上과 流通의 円滑 및 家畜改良의 촉진을 위하여 畜産物の 品質에 대한 等級의 判定(이하 “等級判定”이라 한다)을 받은 畜産物에 한하여 去來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判定의 對象畜産物, 判定方法·基準 및 適用條件 기타 等級判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③農林部長官이 等級判定을 받은 畜産物을 去來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去來地域, 畜産物の 種類·形態 및 施行時期등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地域으로 告示된 地域(이하 “告示地域”이라 한다)안에 있는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의 畜産部類都賣市場法人(이하 “都賣市場法人”이라 한다) 또는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共販場(이하 “共販場”이라 한다)의 開設者는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上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告示地域안에 있는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屠畜場(이하 “屠畜場”이라 한다)의 經營者는 당해 屠畜場에서 처리된 畜産物로서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學術研究用·自家消費用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畜産物の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9條 (畜産物の 等級判定所) ①農林部長官은 畜産物에 대한 等級判定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農産協同組合中央會로 하여금 等級判定業務를 담당하

畜 産 法	畜 産 法 施 行 令	畜 産 法 施 行 規 則
<p>개선</p> <p>第41條(家畜市場의 監督) ①市長・郡守・區廳長은 家畜市場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家畜市場의 位置・構造・設備 또는 家畜市場業務規程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②市長・郡守・區廳長은 市場開設者에 대하여 家畜市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施設의 개선 및 整備를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제</p> <p>대상</p> <p>대상</p> <p>대상</p> <p>대상</p> <p>대상</p> <p>대상</p>

<改正 '90. 1. 13, '94. 12. 22>

④山林의 復舊費用을 預貯한 者가 第3項의 期間내에 復舊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營林署長은 그가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復舊를 代行하게 하고, 그 費用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預貯金으로 充당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 1. 13 法4206>

第92條【林産物の 搬出】 ①山林에서 生産된 林産物을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生産確認用檢印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生産確認票을 붙이지 아니하면 搬出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 12. 22>

1. 國策業務의 執行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
2. 用林家·林業後進者, 林業試驗研究機關의 長, 演習林을 관리하는 各級學校의 長 기타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者가 自己所有山林(貸付林·分牧林을 포함한다)에서 生産된 林産物에 대하여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에게 미리 申告한 自家生産確認用檢印을 찍거나 自家生産確認票을 붙

제98조【생산확인용 점인등】 ①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인찍기 또는 생산 확인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지 제7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영입서관리소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8.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인은 법표9. 생산확인표는 법지 제77호서식에 의한다.

山 林 法	산 립 법 시 행 령	산 립 법 시 행 규 칙
<p>第92條 削除 <97.4.10></p> <p>第93條 [不正林産物の沒收] 第90條・第90條의2・第90條의3・第90條의5 및 第90條의6의 規定에 위반하여 伐採・掘取・採取한 林産物(이하 “不正林産物”이라 한다)은 이를 沒收한다. 다만, 第116條 및 第117條의 犯罪로 인하여 生한 林産物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斂當者에게 還付하거나 이를 處分하여 그 價額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0.1.13.94.12.22, 97.4.10></p> <p>第94條 [車輛등에 대한 처분] 市・道知事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自動車 또는 船舶을 이용하여 不正林産物을 沒收 또는 運送하거나 裝備를 사용하여 不法으로 山林形質變更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運轉士의 運轉免許, 船舶에 승선한 海技士의 海技士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縦士의 建設機械操縦士免許의 取消나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運轉免許・海技士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縦士免許의 效力停止 및 당해 自</p>	<p>제5 장 산림보호</p> <p>제92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93조 [차량등의 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1. 목재 1입방미터이상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2. 소나무 목재 1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의 목재 이외의 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p>	<p>제92조의2 및 제92조의3 삭제 <99.11.22></p> <p>제99조의3 [차량 등의 행정처분 요청기준] ①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해기사면허 및 건설기계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선박 및 장비의 사용정지처분의 요청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5.16]</p>

제94조 제1항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와 당해 선박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 제2항)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와 당해 선박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山林法令便覽

1994. 4

山林廳

- 186 -

山 林 法	산림법시행령	산림법시행규칙
<p>第98條【入山許可】 누구든지 第9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山統制區域에 入山을 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營林課長의 入山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施業 기타 農林水産部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86.12.20></p> <p>第99條【入山統制區域의 解除等】 市長·郡守 또는 營林課長은 入山統制事由가 解除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遲滯없이 入山統制區域을 解除하고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p>	<p>제95조【산불예방등】 ①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은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있어서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산불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84.7.28, 90.7.14, 92.2.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림예정지의 정리작업 2. 빙·해충구제 3. 채조지의 개량 4. 초지조성 5. 사격장조성 6. 방화선 조성을 위한 가연물질 제거 <p>②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할 때에는 입화증을 교부하고 산불예방에 필요한 시설 기타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90.7.14></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위한 시설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p>	<p>제102조【입산허가】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이 입산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1.2.23></p> <p>③법 제9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0.7.14, 91.2.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림, 무육, 사방, 벌채, 임도시설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빙충해구제 및 유해조수 구제준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내 권주민의 일상생업상 필요한 입산

山 林 法 便 覽

1995. 9

산림계전용

山 一 林 廳

第97條【入山統制區域등의 指定等】①市長・郡守 또는 營林署長은 산상豫防・自然景觀維持・自然環境保全 기타 山林保護를 위하여 入山の 統制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入山統制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90. 1. 13, 90. 12. 31〉

②第1項의 入山統制區域을 指定한 때에는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山林의 保護・管理를 위하여 山林行政官署에서 設置한 標識는 이물 移轉・汚損 또는 損壞하여서는 아니된다.

第98條【入山申告】 누구든지 第9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山統制區域에 入山을 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營林署長에게 入山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施業 기타 農林水産部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6. 12. 20, '94. 12. 22〉

제95조【산상에방동을 위한 금지행위】①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임업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92. 2. 22, 95. 6. 23〉

1. 조림예정지의 정리작업
2. 벌・해충구제

제101조【임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시장・군수 또는 임업서장이 법 제97조 제1항 및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2. 4. 15〉

1. 임야소재지
2. 구역면적
3. 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5.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

②급박한 산불위험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 또는 임업서제기관에 공고하고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84. 9. 19, 90. 7. 14〉

제102조【임산신고】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임업서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 8.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임업서관리소장은 신고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0

제 345 호

제 천 시 보

2001. 6. 15(금)

제천시 공고 제2001-345호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6월 15일

제 천 시 장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안)

1. 조례명 :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개정(안)

2. 개정취지

읍면동장 위임사무중 관련법령의 폐지와 대체시행등으로 위임 사무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세정과 소관(10,11,12항)

- 10, 11, 12항의 근거법령인 제천시세조례 제6조를 제10조로 변경
→ 제천시세조례의 전면개정(98.4.11)으로 법조문의 재배열

○사회복지과 소관(1, 2, 4, 5, 6항)

-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2000.8.18)됨
에 따라 근거법령의 삭제로 “요구호 대상자 결정” 사무 삭제
- 『의료보호법』의 개정(99.2.8)으로 “의료보호증”을 “의료보장증”으로
변경
-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 관한법률』이 시행
(2001.3.24)됨에 따라 사제등의 매·화장등 관련사무와 근거법령 정비

○ 농업축산과(1,2항)

-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의 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341호(95.12.29))으로 위임사무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규정 4조에 의거 재위임 사무에 해당되므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제천시사무의위임규칙」으로 등재

○ 농업축산과(3항)

- 근거법령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의 삭제(94. 12.22)와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의 개정(95.12.29)으로 위임사무에서 삭제

○ 농업축산과(4항)

- 관련법의 개정(97. 12. 23)으로 근거법령 변경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조로 변경

○ 농업축산과(5항)

- 축산법의 개정(99. 1. 29)으로 위임사무에서 삭제
→ 가축사장은 축협에서 개설·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시장은 가축시장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축협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축산법27조)

○ 산림녹지과 소관 (1,2항)

- 「산림의 임산물의 반출허가 확인증 발급」은 위임사무에서 삭제
→ 산림법 제 92조 삭제 ('97. 4. 10)
- 「임산허가」 사무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임산신고」로 변경
→ 산림법 제 98조 변경 ('94. 12. 22)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1년 7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회(640-6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진회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